

# 종 합 토 론

## ● 김 혁(사회자, 성균관대 교수)

지금부터 제2분과 지방정부회계교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김혁입니다.

우선 발표하실 분과 토론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옆에 계시는 방송통신대학 심재영 교수입니다.

토론은 제일 오른쪽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삼주 박사님이십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최대규 회계사십니다.

제일 끝이 연세대학교 배득중 교수님이십니다.

120분정도로 심재영 교수님께서 하시고 토론도 5분정도로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심재영(방송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비교적 가벼운 주제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 감기로 목이 잠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논문을 이삼주 박사님으로부터 기획주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국제회계사협회에서 2002년에 발생주의 전환위험관리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제가 검토해보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그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그 사이에 외국에 갔다 오느라 시간이 없어서 깊은 연구를 못하고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러지 못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회계교육의 성과와 과제인데 제목부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팜플렛에는 지방정부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방정부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지방자치단체라고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옛날 김영삼 대통

령 때 지방정부라는 말을 써 와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지자체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원래의 팜플렛과 제 논문의 제목이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회계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4년인데 우리가 정부회계제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은 199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02년에 시행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은 5년 연기돼서 2007년에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방회계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전산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제회계사협회에서도 전환위험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며, 교육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지방의 교육성과를 한번 살펴봤고 그것을 보고 제가 몇 가지 과제를 찾아냈습니다.

우선 지방회계교육은 2004년부터 행자부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과 일반교육으로 시작이 됐는데 전문교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시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소양교육은 권혁별 순회교육이라든가 지방자치 직장교육, 그리고 워크숍, 그리고 우리 정부회계학회도 하나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이어져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200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의하면 2005년까지 4,300명 정도가 전문교육을 받았고 2만명이 소양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문교육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2003년 말부터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 표1을 보시면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429명을 해가지고 토달 838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 7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7일간 교육을 했는데 2006년부터는 10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하나의 표준교재입니다. 즉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표준교재인데 그게 2003년부터 행자부에 위임을 받아서 편찬 작업을 해서 2004년 7월에 정식으로 간행이 됐는데 이 표준실무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행정교육원연구원에 교육과정이 짜졌고 이렇게 해서 그 분야별로 보면 제가 제시한 대로 지방개정과 정부예산회계제도 혁신과 이밖에 복식부기도입, 그 다음에 정부회계 기초개념 및 지방회계기준해설, 그 다음에 재정분석, 운영사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삼주 박사님께

서 지난 2004년에 선행연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발표하신 것으로 보면 교육과목별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와서는 자산실사 및 평가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고 2006년에는 전산시스템 추가가 돼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초기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자체연구원과 공인회계사 주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 복식부기회계담당자, 대학교수가 참여했는데 대개 대학교수 비율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과연 성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질적으로 분석해보지는 않았지만 연구원자체조사에 의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는 중간관리층을 대상으로 해서 2004년부터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 3회에 120명, 2005년에는 2회에 80명이상해서 현재 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 2006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80명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를 보면 지난번 1/3분기 교육대상자를 실국장을 포함해서 중간관리층이 990명 정도다. 이런 걸 보면 교육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강의는 주로 개발원 교수 행자부, 재정정책부가 담당을 했고, 사용한 교재는 강의 담당교수가 갖고 온 그래프 형식의 교재로 사용되었고 공통교재로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이대성 교수가 집필한 복식부기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교육내용은 복식부기제도 도입 개요하고 지방정부책론 그 다음에 사례연습, 정산실습, 그 다음에 현장학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행정연구가 별 차이가 없지만 시간이 거기보다 적게 투입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복식부기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교육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약 5,3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에는 1,800여명이 교육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개 주로 과정명이나 대상인원 횟수 연간인 원교육기간이 표3에 나타나 있습니다. 과정내용은 대개복식부기과정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회계실무과정이 혹시 복식부기 아니냐 했더니, 회계실무는 전통적인 예산회계틀을 말하고 우리가 새로 도입하는 회계는 복식부기과정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과정별교재와 공통교재가 과정별교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들 강사들이

개발한 교재가 사용되고 있고, 공통교재로는 이대성 교수의 복식부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행자부에서 배부한 복식부기 표준교육교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기 쉬운 복식부기 교양교육교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잘 쓰이고 있지 않은지 웹상에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대개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을 따르고 있지만 표4와 같이 시도 지방공무원에 따라서 포커스를 두는 게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진은 대개 서울에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5군데 정도는 대개 서울에서 나온 강사들이 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방에서 지방교수님들이나 지방에 관련된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 외에 일반교육이 있는데 일반교육은 소양교육이나 교양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직장교육이나 워크숍 연차내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왔는데, 대개 2005년까지 행자부자료에 의하면 한 2만여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6년에 권혁별 순회교육이 8회에서 2천여명, 지방자치단체 직장교육을 150회해서 6천여명 정도가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적으로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과연 질적으로 어떤가는 아직까지 검증해 보지 않았고, 이것은 실사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2007년, 2008년에 보고서를 작성해 봐야 거기에서 대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는지 질적인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지금 5월이기 때문에 한6~7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 내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펴보는 기준을 국제회계사협회에서 2002년에 했다가 2003년에 나와 왔는데, 거기에서 전환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주요주제는 타겟그룹과 교육니즈 식별, 교육전략, 교육과정, 표준교재, 교육방법, 강사, 인센티브 이것을 주제로 해서 비교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교육, 일반교육 나눌 수 있겠지만 주로 전문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타겟그룹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들 타겟그룹의 교육니즈를 식별해서 여기에 적합한 훈련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타겟그룹이더라도 교육니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그룹이

설정되면 표준화된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타겟그룹을 대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어떻게 설정했는가를 봤더니 우선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한 부천시 경우에는 대개 3그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눔식의 제1그룹은 회계실무공무원, 제2그룹은 중간관리층, 제3그룹은 국장이상 최고 관리층 의회의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해 왔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주 박사님도 2004년에 이러한 식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중간관리층에 이삼주 박사님이 국장을 포함시켜서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타겟그룹 분류 시에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그룹의 성격이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나 아니면 이용자나 아니면 감사이나 그런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교육내용이 확실히 정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가 최고관리층을 단순히 활용자로 생각하는데 최고관리층은 정보생산의 라인에서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결국 실무책임자가 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별도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추진계획 5가지 그룹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개별실체로 해서 타겟그룹의 예를 들어서 10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소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급박하기 때문에 타겟그룹을 굉장히 협소하게 봤지만 이것을 좀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자산관리자나 기능적인 지원그룹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타겟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전략을 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외부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채용한다든가 컨설턴트를 채용한다든가 또 기타대학이나 훈련기관과 연대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든가 하는데 주로 우리는 기존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고 더 불어서 여기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법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것을 좀 더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제회계사협회에서 제안한 외부회계사를 채용한다든가 기타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공식과정을 통해서 한다든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특히 표준화된 정부회계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인적자원개발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데, 대학을 보면 제가 조사한 것과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조사한 것을 비교하면 아직까지 대학에서 별다른 관심을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학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을 보면 정부회계 교육과정은 재정과 예산에 대한 교육이나 재무회계 원리 및 기준, 회계정보시스템까지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AC에서는 지금 현재 주요한 주제를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좀 특이한 것은 여기에서 윤리규정이 라든가 행위규정, 또는 자산관리 이런 것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대개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또 환경적 또는 조직적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국 회계관리를 하는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하면 현재 우리가 복식부기회계 제도를 도입해도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윤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물품관리나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자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가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대개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교육과 관련해서 시간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대개 복식부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복식부기 원리는 상당히 간단하고 문제는 발생주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인식기준이라든가 측정기준, 보고기준 특히 우리가 부정이 발생한다든가 오류는 대개 측정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중간관리층이나 최고경영층에 대한 교육과정을 할 때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의 경우에는 대개 절차보다는 개관에 초점을 맞추고 개념, 새로운 시스템 생산과 관련된 활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 문제를 항상 우리가 일깨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교재를 보면 표준교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가 강의할 때라든가 실무에서 실무를 표준화 할 때 지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교재가 나온 것은 1984년에 정부회계 교재가 나왔습니다만, 그 후에 나온 중요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미친 교재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재는 현재의 교육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에 표준교재로 개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교재가 있는데 현재 이 교재 외에도 현재 이재성 교수의 “복식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드래

포트형식의 전문강사들의 교재가 있고, 행자부의 “알기 쉬운 복식부기”, “복식부기 교양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요약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대개 전문교재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교재, 행자부의 “알기 쉬운 복식부기”가 있고, 교양교재로써는 이재성 교수의 “복식부기”, 행자부의 “복식부기 교양교육 교재”가 있는데 현재는 이런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타겟그룹 별로 좀더 교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교육방법을 보면 현재 우리가 내부교육, 외부교육, 교실강의나 사이버교육 하는데 주로 우리가 외부교육과 교수의 강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택할 때 비용이라든가 시간변수, 교육에 할애 할 수 있는 직원들의 능력 등을 고려해볼 때 여러 가지로 보면 내부교육이나 사이버강의 같은 것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고려해볼 것은 내부교육을 할 때 상호교차교육을 함으로써 직원들간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직무내용들을 교환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점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개 일반교육이나 또 시스템교육 같은 경우는 IFAC에서는 일반교육은 시작 1년 전에 할 수 있지만 시스템교육은 시행 후 즉각, 그 시점에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회계계획에 따른 정책매뉴얼이나 지침이 잘 만들어지는 것도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강사의 문제인데, 현재 강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회계학에서 보면 정부회계는 고급회계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인시스템이 아니고 하나의 비주류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인력풀이 별로 없고 CPA나 연구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풀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교육은 주로 업무에 관련하고 회계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교양교육이나 소양교육은 대학교수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인센티브인데 사실 아까도 했지만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복식부기 팀에 합류하고 싶어서 합류하는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별다른 인센티브는 없고 책임만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득중 교수님이나 장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부회계사자격증 제도나 공무원 임용시험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나 가점을 준다는  
가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교육에 도움을 주지 않나 이런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  
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GFOA같은데 CPFO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설명할  
때 이것은 브로드 ...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생  
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차제에 이러한 것을 점차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고 빨리 했습니다.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 ● 김 혁(사회자, 성균관대 교수)

감사합니다.

토론자 분들도 한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이삼주 박사님께서 먼저 해 주십시오.

### ●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심재영 교수님의 논문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지방회계교육  
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앞 세션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정부회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자치  
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고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  
하기는 이르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심 교  
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과 좀 더 보완할 부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완할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과제와 관련된 부  
분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전체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방향이 우리가 복  
식부기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교육이나, 아니면 복식부기 도입 이후에 지속적  
으로 할 교육이나 라는 부분이 이원화 되어서 대안이 마련됐으면 훨씬 더 논문이 질  
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교육타겟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교육타겟을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고 이들에 대한 니즈별로 차별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교육은 한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 세션에서도 회계공무원들의 용기를 북돋워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특성상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갖는냐의 여부는 복식부기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더 강조하고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한다면 지금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대체로 어떤 전문기관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왔는데, 이제는 자치단체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한곳에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강사들이 내려가서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회계학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자치단체에서 방문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그 인력풀을 자치단체에 보내주면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인력풀을 갖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제안되어 있습니다.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력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 방문교육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현재로써는 윤리교육이나 개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대안 부분에서 예산과 관련된 교육내용 부분이 일단 제외되어 있는데, 일단 회계와 예산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예산에 대한 교육부분도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강사부분인데요. 지금 정부회계학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강사를 양성해야 하는 된다는 부분에 역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학자 개인들에게 맡기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도적인 보완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공무원시험에 정부회계학이라는 부분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자격증 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는 부분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아닌데 지방자치단체 실무공무원 부분,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인사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받아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회계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일지 모르지만 인사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갖추는 때 까지는 어느 정도 같은 자리에 있도록 하고 만일 이렇게 됐을 때 회계직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성상 많이 돌아다녀야 승진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회계, 예산, 세무 이런 관련 분야를 하나로 묶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인사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 김 혁(사회자, 성균관대 교수)

예. 감사합니다.

### ● 최대규(회계사)

주요 주제는 “자치단체 회계교육의 성과와 과제”인데요. 대체적으로 현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쓰셨던 내용 중에서 토론이라기 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의 문제에 따라서 질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교육대상, 교육을 받아야 될 공무원이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문에서는 자치단체 250개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치단체 말고도 같은 광역자치단체, 의회에 통제받고 있는 교육청이 우리나라에 198개가 있습니다. 198개의 교육청이 있고, 교육청 산하에 직속기관이 186개가 있고, 그래서 384개의 기관이 교육청 산하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7

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밑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현재 한 1만개 정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치단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학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교육에 대한 니즈가 폭이 얼마나 넓다 라는 것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그런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정부 부처가 4개 부처에서 사실은 복식부기를 주제로 일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그 다음에 행자부, 교육청관련, 교육부 그 다음에 국방부 보면 사실은 내용은 다 대동소이한 주제일텐데. 우리 재정부에서 왔지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모아서 진행시킬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각 부처별로 따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견조율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 중에 타겟그룹과 교육니즈의 식별입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신 것이 물품과 재산담당자 대상자를 추가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단식부기하는 경우에서 공유자산과 물품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공유자산 물품관리가 속된 말로 개관이라는 거죠. 실제 공유재산이 증가했거나 물품이 증가했어도 지금 현재 증가 사항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에서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을 바로 잡자하는 것이 사실은 복식부기에서 여유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복식으로 회계처리 하다 보니 예산집행의 내역과 공유재산 물품의 계가 동시에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은 회계만 바꾸는 것이나 공유자산과 물품분야까지도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바뀐다는 것은 결국 공유재산과 물품담당자에 대해서도 현재 단식부기 환경 하에서 공유자산 물품관리가 아니라, 복식부기 환경에서 물품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이 5분 밖에 없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할 못 드리겠는데, 단식부기 환경과 복식부기 환경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채권에 정의해 놓고 보면 법에 있는 용어로 보면 만기 60일 이하의 금전채권은 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발생주의채권 관리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회수가능성 평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세무 쪽으로 가면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채도 관리 못 하도

록 되어 있고, BTL이 채무냐, 아니냐 하는 불명한 부분, 그 다음에 공용재산 물품 쪽  
 으로 가면 이보다 더 많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병철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그 법이 언제 들어 왔냐 하면  
 이번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들어오면서 그 문구가 들어 온 것이고, 과거부터 그 문가  
 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건설 중인 재산을 관리한다. 라는 것이 과거에는 50% 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그런 법이 있는데도 일선 우리 담당자들  
 이 건설 중인 자산 관리하고 있느냐 어디 한 곳 관리하지 않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드  
 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개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복식부기 회계에서  
 는 고려하지 않는데, 공유재산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  
 로, 공원 이것도 역시 법에 보면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자면 공무원들이 법을 위배하고 있  
 다 라고 까지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물품 쪽으로 가면 현재 계산서 작  
 성할 때에 정부물품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소모품 얘기도 하셨지  
 만 사실 현상을 놓고 보면 현재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이 분명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섹션에서 얘기할 때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법률상으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전략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될텐데 제가 볼 때는 전국 자치단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별로 강사진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학회에 그런 역할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고  
 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중에서 보면 윤리규정과 행위규정이 향후 대두 될 것으로 지  
 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실제 기업에서는 분식회계라는 말이 유  
 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제가 볼 때는 분식회계가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  
 다. 분식회계라는 것은 판단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경  
 우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규정과 행위규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행자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약과 관련해서 질문하면 답  
 을 주는 것처럼 복식부기에서도 행자부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을 표준화된 것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교재, 저도 강의를 하러 많이 다니지만 회계기준이 너무 많이 바뀌었

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출납폐쇄기한을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 고려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왜 그렇게 됐는가, 사실 이런 아이템 말고도 보면 강의하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보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표준교재가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도입이 2007년부터 되니 표준교재에 대한 필요성을 행자부에서 가지고 행자부에서 직접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교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냐, 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강사와 관련해서는 강사풀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의 역할로써 대학에서 많은 정부회계학이 생겨서 실무적 능력을 배양한 강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배득중(연세대 교수)

저는 더더욱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국의 지방정부에 인터뷰를 해 보니까 거기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지 100년도 넘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과거 100년 중에서 90년은 아무도 관심도 안 기울이고 재미없이 그냥 마지못해 운영을 하다가 최근 10년간에 갑자기 인기가 부상해서 너도 나도 배우려고 하고 관심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행정환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최근 10년 내에 영국의 예산배정이나 이런 개인별 성과급 지급 등등 회계결과를 가지고 원가평가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식으로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 서로 너도 나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우려고 해서 요즘은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럴 때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상황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 가면 국, 과장님들이 “뭐하러 하느냐?” 아직 실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실무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한 1천 여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장차 과장급, 국장급, 각 기관장이나 단체장 급으로 확산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회계 교육들이 대부분 직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체교육이 교육의 강도는 높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배울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 된 것 같지도 않고요. 저희도

처음에 엑셀 같은 거 배울 때 보면 혼자 배울수 있도록 CD가 작성 돼서 그것을 따라 하다보면 저절로 배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교재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혼자 셀프스터디를 할 수 있는 CD 교재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배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정부회계사 자격증을 주자 라고 하는 주제로 고민도 해 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약요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잠시 접어 두고 있는데, 오늘 토론을 다시 하자고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다듬어보니까 자격증제도도 가기에 앞서서 교육에 대한 인증제도를 먼저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데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수료증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회계학회와 같은데서 주는 교육인증을 받게 되면 조금은 더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증제도를 거쳐서 정착이 되면 나중에는 정부회계사 자격증 제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에 실무담당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지방행정연구원에 별도로 인력을 확보해서 이런 교육과 관련된 콜센터 아니면 헬프데스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신 분이 실무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이것이 저희가 완벽교육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불완전성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김 혁(사회자, 성균관대 교수)

예.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한 두 분 정도 코멘트나 질문을 받겠습니다.

## ● 플로어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배득중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많이 몰라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회계학회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정부연

구가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사업계획을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학술지로서 IFAC인가요? 거기에서 인정해 주는 학회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술지로서 인정해 주는 그런 학회가 돼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 분야의 복식부기나 기타 추진하고 있는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관리회계분야에 BSC라는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인정해 줄 수 있는 학회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 김 혁(사회자, 성균관대 교수)

또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 ● 플로어

발표하신 분, 토론하신 분 전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저도 한 3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해 왔는데 솔직히 저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고는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교수로 봉사하는 건 당연한건데, ... 해당 구청, 시청 등에서 큰 대접 못 받고 있거든요. 시청, 구청에 가서 시장부터 구청장까지 이런 자리에 참석해라 하는 소리 했거든요. 그걸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지 아무리 말로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고 예산도 더 주고 그걸 강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 ● 김 혁(사회자, 성균관대 교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발표자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 ● 심재영(방송대 교수)

아까 이삼주 박사님께서 이원화해서 준비단계와 시행 이후 교육으로 나뉘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로 설명했습니다만, 그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타겟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이 필요

하다. 그런데 제가 아까 강조했지만 지방단체장은 나중에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보고서를 회계담당자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경영자가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대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예산이 포함된다는 것은 제가 일부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단순하게 예산을 전에 했던 그런 예산교육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덜 들고요. 오히려 회계에 필요하면 정부의 재정활동을 회계에서는 대개 활동을 3가지로 나누거든요. 경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활동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해야만 회계에 도움이 되지 단순하게 되면 별로 그렇게 매치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개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 ● 김 혁(사회자, 성균관대 교수)

감사합니다.

사실 상당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산실사 부분도 그렇고, 우리 2분과의 교육문제도 그렇고, 모든 책임은 사실 행정자치부에 많은 부분이 거의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3분과에서 행정자치부의 정운한 사무관이 발표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다 발표를 하시고, 또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때 질문을 하시면서 교육부분도 거기에서 분명히 다루어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2분과는 이것으로.

### ● 플로어

아까 부천시에서 말씀하신 것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 김 혁(사회자, 성균관대 교수)

그 부분 답변 해주시죠.

### ● 심재영(방송대 교수)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학술지 등재후보지를 우선해야 돼요. 올해 그걸 6월

28일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 혁(사회자, 성균관대 교수)

이 세션을 마치기전에 정부회계학회에서 교육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또는 표준교재는 행자부에서 권위있게, 왜냐하면 기준이 나오고, 지침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권위있는 교재라고 해야 되나요. 지침은 새로 만들 것이고,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정부회계학회에서 팜플렛형식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과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